

# Hansun Brief

발행일: 2018년 11월 13일(통권77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공동체자유주의 기획시리즈 1〉

## 시대정신으로서의 '공동체자유주의'<sup>1)</sup> -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비교 -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목 차

1.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2.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에서 '자유'의 의미
3. 공동체자유주의
4. 시대정신의 정치사상 구현으로서 '공동체자유주의'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 요약

최근 공화주의 논의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했다. 이처럼 공화주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념이나 사상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국체의 원리였기 때문에 논의 필요성조차 크지 않았다. 공화주의는 그 어원이 말해주듯, 국가가 한 사람의 군주에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res publica)이라는 '주권재민'의 믿음을 근본으로 하는 이념이다. 오늘날 새삼스럽게 공화주의 이념이 요구된다면, 이런 상황 자체가 국정 이념에 큰 혼란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만큼, 국민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공공선(公共善)을 존중하는 시민적 덕성을 지녀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비지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1)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손동현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러나 공화주의 이념에는 개인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강조되지 않는다. 문제는 국가 번영이 국민 각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기초로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보장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사회는 포퓰리즘에 기초한 정치권력의 대립으로 실질적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개인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의 반작용으로 국민 일부는 시민적 덕성을 결여한 채 근시안적인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존립을 동시에 구현해야 하는 난제 앞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화주의만으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의 길을 찾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존립을 동시에 구현할 이념으로 '공동체 자유주의'를 제시한다. 공동체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인간의 사회적 삶에서 확보해야 할 기본가치로 삼되, 그것이 공동체의 존립을 훼손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공동체의 규범을 강조한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이기주의 아닌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아닌 공동체주의를 종합한 이념으로 오늘 대한민국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정치사회 사상이다.

### 1.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공화주의는 공덕(公德)을 갖춘 시민이 공익을 위해 사익을 양보함으로써 공공선(公共善, common good)을 추구하는 정치사상이다. '공화정'은 공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화주의가 실현된 정치체제다. 공화정은 군주정의 대응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권력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분립 체제를 도입하고 이들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협치를 제도화한다. '공화국'은 공화주의 이념을 지닌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들이 법에 따라 국권을 행사하는 국가다. 오늘날 공화주의는 비지배의 자유(freedom of non-domination)<sup>2)</sup>가 보장된 가운데, 시민운리를 갖춘 국가 구성원이 자율적 참여를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여 공공선을 실현한다는 이상을 표방한다.

2) 이 글에서는 '자율'이 진정한 자유이고 나아가 시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지배를 실현한다는 고전적 공화주의 대신에 '비지배자유'를 핵심가치로 하는 신평화주의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자유주의는 구성원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성, 자유, 창의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사상이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권력분립과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은 보장된다. 이런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인권존중의식과 민주주의가 확산되었고 학문 발전을 유발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물질적 풍요는 자유로운 생각과 상상력이 유발한 자유주의 산물이다. 시장경제의 발전과 세계화도 자유주의 사상에 힘입은바 크다.

### 2.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에서 '자유'의 의미

공화주의에서 자유는 '비지배 자유'이다. 여기서 '비지배'는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려면 정치권력의 자의성 배제가 중요하다. 정치권력을 분립시키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 이

를 위함이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정치를 하려면 협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화주의에서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치가 중요하다. "공화주의에서의 자유는 자신이 타인한테 지배받지 않는 것과 자국이 타국으로부터 지배받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자국이 타국의 지배를 받아도 자유인이 될 수 없고 자신이 타인의 지배를 받아도 역시 자유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3)</sup>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외부의 억압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가운데 자신이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유이다. 이 자유에는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으로 이들은 천부적인 인권에 속하는 것으로, 어떤 정치권력도 박탈할 수 없는 자유이다.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약하려면, 그것은 사전에 법률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자유주의에서의 자유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이다. 자유주의 사상에는 이성에 의한 도덕적 자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되는 자연법적 자유, 법의 허용이라는 내재적 한계 내에서의 실정법적 자유 등 광범한 차원의 자유 이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자유주의에서 법 안에서의 자유 및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 간섭받지 않을 자유(freedom of non-interference)이다. 반면 공화주의에서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지배받지 않을 자유, 비지배의 자유이다. 때문에 소극적 자유인 자유주의 '자유'보다 훨씬 더 확실한 자유라고 평가<sup>4)</sup> 받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감독과 위협에 의해서도 자유가 축소될 수 있다. 이 경우 힘 있는 자

들에 의한 지배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자유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에서의 '자유'와 공화주의에서의 '자유'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 3. 공동체자유주의

박세일이 제창한 공동체자유주의는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이다. 박세일은 공동체자유주의를 정치이론과 철학이론을 구분하지만, 여기서는 정치사상으로서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종합한 공동체자유주의에 논의를 집중한다. 박세일은 이 논의에 또한 서양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동양의 공동체주의를 종합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정치사상으로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본다. 국가권력이나 사회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지나친 자유는 공동체의 피해를 가져온다. 오늘날 이기주의가 범람하면서 가정파괴, 학교붕괴, 환경파괴, 범죄증가 등의 만연 현상이 그 사례이다. 정치적 공동체주의는 이런 문제를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공동선에 대한 자각과 공동체에의 가치와 연대를 소중히 하는 자발적 노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공동체주의는 서로 대립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다.

정치적 공동체주의는 그 지향에 있어 공화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유교권동아시아에서는 특히 공동체주의가 지배적 정치사회 이념이었다. 여기서 인간은 개체성과 공동성을 함께 갖는 관계적 존재로 파악된다. 인간은 독존적·개체적 존재이지만, 그 개체적 정체성의 형성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계적·

3) 김주성. 공화주의와 자유 그리고 번영. 미래한국. 2018.10.4.

4) 김용직. 민주화 이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위기와 도전 그리고 과제. 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2018.9.20(프리미엄 리포트).

연고적 자아"(situated encumbered self)라는 것이다.<sup>5)</sup> 연대, 관용, 배려, 참여 등의 태도가 구성원들의 핵심적 덕목으로 여겨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비지배적 자유를 핵심가치로 삼는 공화주의 역시 공공선, 참여, 준법정신을 주요 시민덕목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박세일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자기발전·자아실현을 위한 '자아 완성의 길'이고 공동체주의는 이웃 성취, '이웃 완성'의 길이다." 따라서 공동체자유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웃이나 타인과 다른 조직에 대한 포용, 배려, 자율, 참여 등 공동체의 가치도 중시한다. '자유'가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공동체의 정신까지 훼손하는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이기적, 배타적, 방임적 자유를 경계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랑과 품격을 존중한다. 공동체의 존립과 번영을 존중하지만 개개인의 '자유'의 확대 또한 중시한다. 한마디로 말해 공동체자유주의는 자유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고 공동체주의를 보완원리로 하는 정치사회 사상이다.

공동체자유주의에서 '자유주의'는 개인이 상상력과 창의성을 유발하는 모체로서 '개인발전의 원리'인 동시에 '국가발전의 원리'로 작동한다. 자유주의가 인류의 발전과 진보를 가져온 것이 이를 반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업화는 경제적 자유화의 결과라 할 수 있고 민주화는 정치적 자유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 수호를 위해서는 권력제한이 불가피

하다. 3권 분립도 자유를 창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오늘날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선언이 그러하고 개별법에서 개인의 자유보장을 위해 국가권력의 제한규정을 둔 것이 그러하다. 행정법에서 국가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침해를 제한하고 형법에서 죄형법정주의가 중요시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동체자유주의에서 '공동체주의'는 개인행복의 원리와 국가통합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공동체주의'는 사랑, 배려, 포용의 가치가 담겨 있는 '개인행복의 원리'이다. 또한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국민통합의 원리'이기도 하다.<sup>6)</sup> '공동체주의'는 연대(連帶)와 상호 보완(補充)을 구성 원리로 하고 정보공유와 협치를 운영원리로 한다. 따라서 공동체자유주의는 국가번영을 위해서 자유주의를 국정의 중심에 두면서도, 국가통합을 위해서 공동체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정치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동체자유주의가 "국가조직내지 운영원리로서 그리고 국가정책의 결정원리로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4. 시대정신의 정치사상 구현으로서 '공동체 자유주의'

공화주의는 개인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정의와 공공선을 추구한다. 하지만 공화주의에는 형성된 담론이 개인의 권리보다 우월하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공화주의는 시민의 덕성에 기반 하는 시민적 책무를 전제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책무보다 권리를 앞세우는 이기적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 상황에서는 이 사상의 현실적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5) 박세일, 왜 공동체자유인가? 위공 박세일 유고집-한반도선진화와 통일의 꿈, 2018:316~317

6) 박세일, 대한민국의 미래, 공동체자유주의가 답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 2015.6

쉽지 않다. 21세기 탈현대사회에서 공공성의 실현을 개인적 덕성에만 의존하기도 어려워졌다. 보다 구체적인 공동체적 규범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공동체자유주의'는 공동체의 의무를 강조하는 '공화주의' 한계를 '자유주의'로 보완하고, 또한 과잉자유주의로 나타나는 '자유주의' 부작용을 '공동체주의'로 보완한다. '공화주의'에서 펼치기 어려웠던 개인의 인권보호와 개인의 창의성 발휘를 '자유주의'가 '적극적으로 보완한다. 또한 '자유주의' 한계로 작용하는 이기주의나 이에서 비롯하는 사회적 격차 문제 등은 공공선의 인식, 배려와 포용의 공동체적 규범과 시민윤리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와 공화주의 가치로 극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공동체 정신이 약화되고 피폐해졌다. 그 결과 가족공동체 해체를 비롯해서 사회공동체의 약화, 나아가 국가공동체에 대한 신뢰저하 현상이 이어져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자유주의에 대한 폄하 현상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개편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삭제되었다. 이밖에도 국가주의적 사고로 변질·확대되는 도덕주의적 발상이 발전의 동인(動因)인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규제가 그 사례이다. 적폐청산이라는 도덕적 슬로건 아래 행해지는 청와대의 독주는 급기야 민주정의 요체인 삼권분립의 원리까지 위협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자유'의 폄하와 공동체의 약화현상은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바로잡기는 더 어려워지고 사회적 비용도 더욱 증가한다.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온 자유주의를 보다 건강하게 육성하고 그 과정에서 약화된 공동체정신은 공화가치를 포괄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확산 실현함으로써, '공동체자유주의' 이념이 정치사회의 영역에서 시대정신으로 발휘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